

# 野 “2선 후퇴” 없는 수습책은 국면전환용

### 박대통령 진정성 의심 초강경모드 전환

### 靑 ‘살라미 전술’로 시간끌기에 장외 투쟁 나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야권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며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수습책을 제시하자 야권이 초강경 모드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인적선신→책임총리→국회 총리 추천 제안’ 등 수습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 계속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계속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권은 박 대통령이 본질적 수습책인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2선 후퇴를 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회피한 채 국면전환을 위해 ‘절름’ 수습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사실상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했다.

이는 야당의 계속된 요구사항이어서 정국 수습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야당은 부정적 견해 속에 청와대의 속뜻을 묻기로 했고 결국 박 대통령이 ‘2선 후퇴’ 의지가 없다고 판단. 9일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청와대 측은 전날 야당의 의구심에 대해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체없이 임명해 거국중립 내각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며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 각료 임명제정권과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총리가 훌륭한 분을 장관으로 추천하면 같이 협의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협치를 한다는 것” “대통령은 경제, 외교에 정말 치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지를 비친 것이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국회에 책임총리 카드를 던져놓고 야권의 자중지란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면전환을 통해 시간을 끌어 남은 임기를 보호받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2선 후퇴’ 요구는 “법에 없는 개념”이라며 거부하고 있고 탈당 등의 후속 카드는 아껴두는 모양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전날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공통 입장을 밝히며 주말인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강경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야권이 그동안 선부르게 대응하다가 박 대통령의 ‘살라미 전술’의 뒷에 걸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살라미전술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번에 목표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해 쟁점화하고 차례로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사항을 조금씩 수용하면서 야당이 말려들게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실제로 어떠한 권한도,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어떠한 것도 없이 총리만 달력이라고 하면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이 놓은) 뒷에 완전히 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이 말한 뜻에는 ‘역풍’ 우려도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수습책을 잇따라 내놓는데도 야당이 강경 일변도로만 나설 경우 자칫 국정혼란 수습을 외면한다는 비난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총리 후보를 누구로 추천하느냐를 두고 정당·계파 간 이견이 부각될 경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이 묻힐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권 주저 말라”

### 범여권 원로모임 국가전략포럼

### 비상시국 토론회서 성명서 발표

야권이 아닌 범여권 정치 원로들은 9일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행사를 주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7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명박(MB)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수습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대상으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

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 사태와 같은 대통령 측근 비리·부정부패의 근본적 원인은 87년 체제가 만든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헌 논의가 실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각범 카이스트 교수도 “권력 사유화가 점점 저질화 극에 치달고 있다”면서 개헌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김진현 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잘못된 트라우마 덩어리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 대통령이 되는 이 나라의 투표행태와 정치문화도 문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포함해 나경원, 이근현, 권성동, 김성태, 김세연 의원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권한 포기 어디까지

### 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외치 명확한 구분 불가

### 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임명권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추천한 총리에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총리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야권은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권한을 이양할지가 불분명하고, 2선 후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으면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2선 후퇴’라는 말이 법적 용어가 아니고, 구체적인 함의를 놓고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석들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고, 실사 거국중립 내각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권한’을 부여받은 총리와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간에 충돌 소지는 곳곳에 널려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형태의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내치와 외치를 무 자르듯 나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예컨대 정국의 핵심 현안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 분야는 외치에 해당하지만, 사드 배치 예정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는 내치에 해당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과 협상을 하는 문제는 외교사안이지만, 해양경찰에 대한

지휘는 내치의 영역이다. 해경 조직 역시 국민안전처 소속이다.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하고 내치와 외치를 모두 총리에게 위임한다고 해도 문제가 남는다.

특히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6년 동안 사법부의 기조가 변할 수 있어 대법원장 임명 문제는 내년 여야가 충돌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25일까지다.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난다고 해도 현행 헌법에서 총리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실사 박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고, 본인은 단순히 서명만 한다고 해도, 총리가 여야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 대법원장을 쉽게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을 준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특히 대통령이 4대 권력기관장으로 통하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임명 권한을 쉽게 놓을 수 있을지도 두고볼 일이다. /\*연합뉴스

# 5년만에 다시 뭉친 안철수-박원순 새로운 연대 시도하나

### 9일 회동 “대통령 즉각 퇴진”

### 비상시국회의의 구성 합의

### 주말 촛불집회 함께 참석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 시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국정 마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도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시장과 안 전 대표의 연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시장이 안 전 대표와의 연대의 길로 나설 경우, 민주당 대선 경선은 진노 주자들의 경쟁 구도로 좁혀지면서 확장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공개로 만나 50분 동안 의견을 나눈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안 전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4개월 남은 기간 동안 총리가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오랫동안 나라를 이끌 수 없고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인 격차해소, 위기관리, 외교적 공백 등을 메우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빨리 혼란을 수습하는 방법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고 빨리 새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오른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저와 박 시장의 공통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도 “국민의 요구는 대통령이 즉각 물러나라는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

는 정치인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를 위해 각자 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야 3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

사회 원로가 참석하는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안 전 대표도 전날 여야 주요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정치 지도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